월/요/광/장

박 상 호

교육을 병들게 하는 국민의식

인간의 행복추구 방편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육체의 만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유형이고, 둘째는 정신적인 만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유형이며, 세 번째 단계는 영의 만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오직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시 한편이나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정서적 쾌감을 느끼며 행복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직 주된 관심을 동물적 '생존'과 '소유'에 두고 살아갈 뿐이다.

제 영역에서 정신적 만족을 추구해왔던 순수했던 정신적 가치 추구의 삶도 이미 물질 지상주의로 오염되고 있다. 물질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가치관이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물질 축적은 대다수 국민의 삶의 목적이며, 모든 가치판단의 척도가 되어버렸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교육도, 부의 축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본래 우리나라는 이웃과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이웃의 소중함을 알았던 정으로서 유지되는 사회였다. 식사 때가 되면 담장너머로 뜨거운 팥죽그릇이 오가고, 밤새 사랑방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정을 나누었던 사회, 모내기할 때 지나가는 길손을 불러 새참을 함께했던 여유가 넘쳤던 공동체였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옆집에서 과일이라도 가져오면 고맙게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며 별로 반가와 하지 않는 세상, 한밤중에 골목에서 비명이 들려도 아무도 나와 보지 않는 세상, 아파트 옆집에 독거노인이 사망한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삭막한 사회로 만든 주범은 배금주의 사상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경쟁의식이 모두를 이웃이나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로 만들게 했다. 물론 비전을 갖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에 있어서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이다.

문제는 지나친 이기주의와 특권의식을 갖게 하는 권위주의의 편승으로 인해 아름다운 비전이 아니라 탐욕적인 욕망으로 변질된 자기중심적 성공 패러다임으로 인하여 사회의 정서가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는 데 있다.

배금주의 풍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해악을 끼쳐왔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소중한 우리의 교육현장은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이 외면당하는 기형적인 괴물이 되어 버렸다. 학교 교육현장은 어떤 힘들에 의해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이나, 정서적 삶의 질을 높이는 감성교육보다는 확실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하는 현실적이며 실리적인 교육중심으로 교육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학생들 역시 입시에 영향을 주는 교과목이 아닌 감성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목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최근 모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현황에서 확인된 사실은 400명 재학생 중에서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20여명 정도였다. 380명은 미술과목이 자신들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룹인 것이다.

학부모나 위정자들은 21세기는 창의성이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창의교육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정책을 펼친다 하나 그 결과는 구호를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뿌리는 썩어있는데 잎만 무성해지기를 바라며 비료주기에 급급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학부모들은 안정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자식들에게 하나같이 일류대학에 입학을 강요한다. 이런 욕망에 빠져있는 학부모들의 무서운 마력에 교육제도는 발목이 잡혀있다. 일류대학 진학에 방해되는 교과목이나 교육제도는 발붙인 여지가 없다. 기형적인 교육은 기형적인 인물을 만들어 낸다. 개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수동적이며 독선적인 인간,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반쪽인간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나라의 비전 있는 미래를 희망하며 좀더 멀리, 보다 넓은 시각으로 우리 국민의식구조에 대해 심각하게 분석하여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나아가 이제는 온 국민이 그 폐해를 인식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선진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감하게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펼쳐야 하지 않겠는가.

〈조선대 미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다중시설 화재예방 근본대책 서둘러야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가 하루 새에 두 건이나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이들 두 화재는 큰불이 아닌데도 연기로 인해 대형 인명 피해가 났다는 점에서 너무나 후진적이다.

13일 새벽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모텔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불이나 주점 내부와 모텔 1층 계산대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에 진화됐다. 하지만 모텔 5층에서 잠자던 투숙객 3명이 양탄자 등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12일 새벽에는 경북 포항의 한 사설 노인요양시설에서 불이 나 노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노인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70대 이상의 중증 치매·중풍 환자라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변을 당했다.

광주 모텔과 포항 노인요양시설 화재는 사상자 모두가 화상보다는 연기에 질식됐다. 연기가 연통 역할을 한 계단을 타고 상층부로 급속히 올라가는 일명 '굴뚝 효과'에 당한 것이다. 이는 화재시 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두 시설 모두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았으며, 스프링클러는 애초에 없어 인명피해를 키웠다. 화재시 연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염성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음은 말할 것도 없다. 다중시설이 화재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이 이들 두 곳뿐이 아닐 것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과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한 뒤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 전에 당장에라도 화재에 취약한 각종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참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여론 따라야 한다

국립공원 지리산 권역인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 경남 함양·산청군 등 영·호남 4개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케이블카가 운영되면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구례군은 산동 온천관광지구~노고단 4.5㎞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지난해 환경부에 신청서를 냈으며 남원시도 반선~반야봉 7.3㎞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산청군 역시 중산리~제석봉 5.4㎞ 구간, 함양군도 백무동~장터목 4.5㎞ 구간에 케이블카를 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앞다퉈 케이블카 설치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1일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의 길이가 기존 2㎞에서 5㎞로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케이블카 길이가 길어지면 그만큼 조망도 넓어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돈벌이'도 잘 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 정부와 이들 지자체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오히려 탐방객이 분산되어 등산로 주변의 환경 훼손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경단체의 반대 입장을 떠나서라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무성한 산림이 훼손되고 많은 입장객으로 민족의 영산이 신음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는 내장산, 덕유산, 설악산 등의 시설물이 유원지로 변모해가는 실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성 모델로 거론되는 경남 통영의 케이블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서두를 일이 아니라 환경 훼손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론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일본이 20년 동안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양 영 희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이 언론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언론인을 형사고소 하거나 언론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과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 대법원은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한다.

1990년대 들어 언론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언론기관들이 신속성을 중시하면서 사실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표현의 자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면서도 언론기관이 보도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언론의 또 다른 가치인 진실성, 공공성을 함께 추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피해자가 공인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이 되는 기준이 동일한가? 공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나 기관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언론이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거 없는 보도를 일삼는다는 의견부터, 비판이 중심기능인 언론에 대해 권력기관이 소송으로 재갈을 물리려한다는 비판까지 여러 견해가 날카롭게 대립한다.

대법원은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각 영역별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은 언론의 핵심기능이므로 공적인 논쟁과 공인에 대한 보도에 관해서는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올바른 정책결정과 감시를 위해 개인의 인격권 보호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그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인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표현 그대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기 고

심 명 섭

지푸라기 인생

단풍이 곱게 물든 가로수를 보면 완연한 가을임이 느껴진다. 늦게까지 버티고 서있던 여름, 그리고 성급히 찾아온 겨울 탓에 가을은 말 그대로 순간에 지나가 버릴 것 같다.

지나가버릴 가을이 아쉬워 기말시험이 끝난 아들과 집사람 이렇게 셋이서 모처럼 가을 산행을 했다. 우리말에 가을 산행은 가난한 친정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을 산은 먹을거리가 풍성하다는 뜻일 것이다.

가는 도중 황금들판을 둘러보는 여유를 찾아 보았는데 가을철 추수가 거의 끝나가는 들판이었다. 예전에는 농부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벼 수확을 하는 광경이었는데 흥이 넘치던 농부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요란한 기계소리와 함께 콤바인이 벼를 수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을철 추수가 끝나가는 들판에 하얀색으로 동그랗게 감아져 있는 커다란 물체가 몇 개씩 눈에 띄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지푸라기 묶음이었다. 옛날에는 땔감이나, 가축사료로 그리고 어머니들이 콩나물을 기를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었다.

지푸라기 묶음을 보고 있노라니 갑자기 생각났다. 어느 날 개미 한 마리가 기다란 지푸라기 한 토막을 조그만 입에 물고 어디론가 바삐 기어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어딘가에 꼭 쓰일 것 같아서 무작정 입에 물었다. 하지만, 너무나 무거워서 몇 번이나 뱉어 버리고 싶었어도, 지금까지 물고 온 수고가 억울해서 그냥 물고 가고 또 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고 허기져서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잤다.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 무언가 아른거려 눈을 비비면서 건너편을 보니 커다란 먹잇감이 보였다. 개미는 먹잇감이 눈에 아른거렸지만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다. 거기에는 조그만 개울이 파져 있고 긴 강처럼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개울을 돌아서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다. 포기할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머리를 굴리고 굴린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옳다! 하고 지푸라기를 다시 잎에 물고 건너편의 나무뿌리에 휙 하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던져 보았다. 그랬더니 운 좋게도 기다란 다리가 되지 않는가? 개미는 그 다리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아까 보았던 먹잇감을 찾았다. 먼 길을 오느라 뱃속은 꼬르르 꼬르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정말로 오랜만에 포식을 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무거운 지푸라기를 챙겨 입에 물고 어딘가를 향해 계속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렇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나 물건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렇지만 개미가 물었던 지푸라기처럼, 우리 서로는 어느 순간에 자신에게 유용한 물건으로 변하는 수가 있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서 행동하고,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아량을 베푼다면 우리도 개미의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

지푸라기 인생! 이게 우리가 나가야 할 진정한 인생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는 뜻있는 가을 산행이었다.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과장·행정학박사·수필문학가〉

도시민 농어촌체험관광, 도농 상생의 장 돼야

농장 봉사활동을 위해 농촌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을 칭하는 '애그리투어리즘(agritourism)'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어사전인 웹스터에도 등재될 만큼 농어촌체험관광이 국내외적으로 확산 되고 있다.

농어촌체험관광은 도시민들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을, 농어민들에게는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농축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농어업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 주민들을 돕는 방식을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회가 되면 수해지역을 찾아가 농어민을 위로하고 농산물도 구입해준다면 보람있고 의미 있는 휴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도시인들이 그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농어민과 도시민이 서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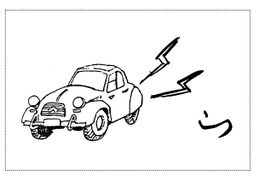
▲김윤지·여천시 안산동

無 等 鼓

전기차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동차(EV : Electric Vehicle)는 배기가스가 없고 소음이 작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아 '꿈의 자동차'로 불린다.

하지만 전기자동차가 가솔린차보다 먼저 상용화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세기 후반에는 가솔린차보다 많았다. 문제는 무겁고 큰 배터리와 긴 충전시간이었다. 전기차는 이같은 취약점에 더해 20세기 이후 가솔린차의 성능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사라져갔다.



전기차가 다시 세인의 관심을 끈 것은 온난화와 환경오염이 범지구적 문제로 대두된 199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공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판매량의 10~20%를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는 차량으로 만들도록 의무화한 것이 단초가 됐다. 이른바 '배기가스 제로법'이다.

이에 발맞춰 GM은 1996년 EV1을 내놓았다. 3년 뒤에는 성능이 향상된 2세대 모델이 출시됐고, 멜 깁슨이나 톰 행크스를 비롯한 유명 스타 등에게 장기리스로 판매됐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이 전기차는 2003년 돌연 전량 수거돼 폐기됐다. 생산 중단을 둘러싸고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크리스 페인 감독의 '누가 전기자동차를 죽였나'(Who killed the electric car?)라는 다큐멘터리가 대표적이다. 휘발유차의 판매 감소를 우려한 자동차·부품·석유업계가 전기차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거짓 문제점을 퍼뜨린 후 로비를 통해 관련 법을 철폐시켰다는 것이다.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규제로 전기차 개발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업체들도 가세했다. 탑알앤디는 4인승 전기차 'iPlug'를 선보였고, 영광군은 CT&T 등의 투자를 유치해 전기차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다. 전기차의 대중화에는 여전히 비싼 차값과 충전 불편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구매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